

“고속도로는 임대료 받는 건물과 같아”

경부선 등 4개 노선 평균 186% 회수율... 정동영 의원, “장부 없이 자산관리... 제대로 평가·관리 필요”

전국의 고속도로를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정동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노선 중 투자비 회수율 100%를 넘는 곳은 울산선, 경인선, 경부선, 호남지선 등 4개 노선이었다.

4개 노선의 총 투자비는 8조원이었고, 총 수익은 22조3,500억원, 비용을 뺀 이익만 11조8,000억원이었다. 투자비를 뺀 회수율은 4조원으로 평균 186%의 회수율을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땅 위로 뺀 건물과도 같다. 건물에 임대료를 받듯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는다”며, “회수율이 100%를 넘겨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영업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는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산”이라며 “정상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무형자산으로 분류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를 장부상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부지매입과 건설비 등 초기투자비를 파악할 수 있고, 인근 공시지가가, 고속도로 영업권으로 시세 파악이 가능한데도, 누구 소유인지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파악부터



“엄지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휴게소 임대료 등 부대 사업으로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자산임에도 방치되어 있다. 결국 공기업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감춘 결과가 되었다”며 “공기업 자산이 저평가되면서 건설 및 투자가 고스란히 부채로 남

아, 빚만 늘어 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민간사업의 근거가 되어 막대한 세금 낭비와 엉뚱한 사업투자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고궁 야간 관람, 10명 중 3명은 NO SHOW

고궁 야간 개장 시 관람객 10명 중 3명은 입장권 구매를 하고도 실제 입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는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고궁 야간 개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고궁 야간 관람 입장표를 구매하고도 실제 입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궁 야간 개장 행사는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야간 특별 관람을 실시한 이후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야간 개장을 찾는 인원이 많아보니 2013년도부터는 야간 인원 관리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관람인원을 4,500명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전 예매 대비 실제 입장객 비율은 경복궁의 경우 2014년 83.9%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76.3%에 머물렀다. 창경궁의 경우 2014년 사전 예매 인원의 입장 비율은 72.3%를 기록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62%까지 떨어졌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인원을 합해 비율을 계산하면, 사전 예매 이후 실제 입장한 인원은 70.7%에 불과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입장권은 가장 최근 9월 경복궁 야간 개장 티켓이 예매 오픈 2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예약을 하고도 입장을 하지 않는 소위 ‘NO SHOW’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장료가 저렴하다 보니 예매만 해놓고 안 가는 이들이 늘어 점차 관람을 원하는 인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고궁 야간 개장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문화와 역사에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라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입장인원 제한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실제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궁궐의 멋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 입장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치아카데미 2주차 진행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국민정치아카데미 2주차 강연이 개시된 가운데 17일 2주차 강연이 진행됐다.

2주차 아카데미는 도당 회의실에서 50명의 수강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3명의 강사들이 열띤 강의로 채워졌다.

첫 번째 강의로 나선 최인정 도의원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과 기초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인 정영진 교수의 ‘국민의당과 중도’라는 주제로 국민의당이 국내 정치 지형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성향 등 당의 상황을 제 3자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수강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교수는 국민의당이 기존에 존재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혁파하고 중도로서의 제 3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중앙부처 업무인계인수서 인계내용 단 한두 줄

김관영 의원,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서 없어”... 행정안전부, 전부처 실태조사 나서

전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인계인수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 단 한 장짜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부처가 있으며, 관련 대통령령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부서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뒤늦게 소관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정부 위 소속 5개 장관급부처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서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총리실의 경우는 최근 2년간 업무인계인수서를 분석해보니, 대통령령에 따르는 양식대로 작성은 하고 있지만 단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절대다수였다. 일부 업

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업무 인계내용이 단 한두줄에 그치는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 중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입력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적위의 경우는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른 채 자체 양식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서 정확한 인계인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해진다”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수인계자의 고의든 아니든 중요한 업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정부쪽에서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이 같은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전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부처에 ‘공무원 업무 인계 인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 아래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업무인계인수서에는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미결사항 등 업무현황과 관련된 내용 및 관련문서 현황, 물품 예산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김진성 기자

“법제처, 靑 세월호 컨트롤타워 수정지시 적용”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안전행정부(현 행자부)로 임의 변경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법제처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미리 심사할 의무가 있는 법제처가, 청와대의 임의 수정 지침에 대해 심사를 거쳤는지, 정상적인 훈령번호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4년 7월 말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본을 2014년 8월6일 송부 받고도 이를 기계적으로 접수만 했을 뿐, 수정본에 정상적인 훈령번호가 부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2014년 7월 말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지침에는, 정상적 법제처 심사를 거쳤을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장이 부여하는 훈령 일련번호가 붙어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같은 수정본을 일방적으로 하달 받고도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접수된 지침을 수정 반영했던 것이다. /뉴시스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2017 8년연속 문화관광축제

- ※ 순창읍내, 공설운동장 앞 ↔ 축제장 셔틀차량운영
- ※ 붉은옷 착용시 축제장 상품구매 할인 혜택
- ※ 축제 대표 프로그램
 - 2017인본 고추장 떡볶이 파티
 -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고(鼓)추(秋)장(場)락(樂) 퍼레이드
 - 화끈락(樂) 페스티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어먹기, 전통장류 소스만들기 등
 - 민속마을 불빛쇼(EDM), 좀비야 놀자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